

환경마크제도의 도입 및 추진방향

1. 머리말

환경마크 (E-마크)제도란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에 비해 생산·사용·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덜 시키거나 에너지 및 자원절약과 관련있는 저공해상품에 공인기관이 일정한 마크를 부여하여 다른상품과 구별하여 줌으로서 저공해상품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독일·일본·캐나다 등에서 시행중이며 최초의 시행은 지난 '79년 5월 첫선을 보인 독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K.S 마크, Q 마크, 품마크 등 여러가지 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나 이들은 대부분 공산품 품질을 기준으로 하여 부착하여 왔으며, 수질, 대기 등 환경에 대한 영향은 검토되지 못하였다.

최근, 폐놀사건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오염저감 기술개발, 시설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병행하여 청정기술(Clean Technology)개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신현국/환경처 기술개발과장



2. 환경마크제도의 의의

환경마크제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간여하면서 소비자단체·산업체·학계대표 등 전문가 그룹이 주관이 되어 저공해상품을 선별,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간접적인 규제수단이다. 즉, 전문가 그룹으로 형성된 공인기관에서 생산·사용·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덜 일으키거나 자원절약에 기여하는 상품을 지정·표시하여 줌으로서 소비자로 하여금 공해가 적은 상품을 골라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품들이 잘 팔리게 함으로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기업에게는 기업 스스로 저공해상품 또는 청정기술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제도는 “녹색소비자파워”라고 불리기도 한다.

환경오염의 많은 부분이 상품의 소비로부터 발생하며, 상품소비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를 사후에 대응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을 수반하고 환경보전 효과도 크게 떨어진다. 상품의 소비시 또는 폐기시 환경오염을 줄임으로서 비용을 적게 들이고 환경보전을 높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환경보전실천운동을 도와주고 환경보전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 스스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실천방안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품구입시 환경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환경마크상품에는 환경마크부여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유는 환경정보를 알리는데 도움을 주므로 소비자의 환경보전의식을 높이는 기회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마크제도는 기업에게는 기업체 스스로 저공해제품이라고 주장·판매하는 것을 객관화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기업이 주관적으로 주장하는 환경상품이 아닌 객관적으로 환경상품이라고 인정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상품구입시 혼란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높여준다.



즉, 환경마크제도는 강제적인 규제없이도 소비자와 생산자의 자발적 노력에 의해 그리고 시장원리에 의해 환경보전을 할 수 있는 부드러운 환경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3. 외국의 실태

환경마크제도는 '79년 5월 독일정부에 의해 최초로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동 제도를 본받아 일본에서는 '89년, 캐나다는 '9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환경마크제도는 '77년 연방장관과 각주의 대표에 의해 도입을 결정한 약 3년후부터 시행하였으며, 일본과 캐나다는 약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에 시행되고 있다. 이 이외에도 덴마크·필란드·아이슬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5개국은 '90년말부터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91년말부터, 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한편 유럽공동체(EC)에는 독일의 환경마크제도를 EC 통합후에 EC 공동제도로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있으며, 미국·프랑스에서는 환경마크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환경마크인 “푸른천사”마크를 단 상품이 지난해 5월 현재 60개그룹 3천5백가지가 선보였다. 독일의 “푸른천사”상품들 가운데는 오존층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가 들지 않은 스프레

환경처 연구실

〈그림 1〉 주요국가의 환경마크



캐나다

미국

프랑스

이, 재사용 식품바구니, 물을 절약하는 전자샤워기, 재생타이어 등이 포함돼 있다.

'89년 세계 두번째로 환경마크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민간단체인 환경협회와 그 내부조직인 "에코 마크사업국"이 외부기관에 검사를 의뢰,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89년 2월부터 두괄로 지구를 감싼 도안의 환경표지를 붙이기 시작, 지난 1월까지 불과 2년만에 무려 31종 1천 18개의 상품이 지정받았다. 일본에서는 재생종이를 사용한 환경잡지·서적을 비롯 못쓴는 식용유를 재생한 비누, 100% 폐지를 사용한 화장실용 휴지, 오존층파괴의 주범인 프레온가스(CFC)를 사용치 않은 스프레이, 짚으로 만든 다다미 등이 환경마크의 사용을 허가

받고 있다.

'90년부터 이 제도를 받아들인 캐나다는 재활용 종이를 쓴 신문·생활쓰레기로 퇴비를 만드는 장치 등 14종에 환경마크를 주고 있으며 올해까지 모두 39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도 그린실(Green Seal)제도가 있으며, 프랑스는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밖에 스웨덴·영국·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 많은 선진국들이 녹색상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 유럽공동체 차원의 환경마크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4. 우리나라의 입장

전술한 바와 같이 폐놀사건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으며 각종 기초처리시설의 확충과 함께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각종 홍보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환경에 대한 검토·분석이 미흡하여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다. 최근 저공해 합성세제에 대한 생분해도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사우나·목욕탕에서 샴푸·린스의 사용을 않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외국산 합성세제 또는 비누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기업은 기업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공산품품질관리 차원에서 여러가지 마크를 시행하여 왔으나, 환경마크에 대한 검토는 없었으며 최근 환경처가 주관이 되어 청정기술개발의 촉진과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지난 3월부터 실무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왔다.

최근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이 크게 높아졌고, 기업들도 상품이름에 “바이오”, “무공해”등의 문구를 앞다투어 붙이는 등 환경마크지정제도의 여건이 무르익고 있으며,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저공해 상품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간접적인 수단으로서 환경마크의 도입이 절실히 판단된다.

5. 향후계획

공청회 등 각계·각종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선진국에서 기 시행하면서 터득한 교훈을 거울삼아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한다. 최근 환경처가 주관이 되어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바 있다. 환경마크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관계전문가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적용대상의 선정,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운영문제에서는 많은 의견이 있었다. 외국의 사례를 참작, 후발자의 이득을 최대한 살리면서 국내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까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주요추진방향을 소개하면 적용시기는 '92년도의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초기에는 대상품목을 최소화하여 시범실시하고 점차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제도의 빠른 시행을 위해서 현재 환경마크의 공모, 운영주체의 선정, 초기 대상품목선정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최근 짹트기 시작한 “녹색상품”, “저공해상품”을 위한 연구개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